지하철 공사구간 '복공판 단차' 없애고 혼란 구간 정리한다

광주시, '시민불편 신속대응 도시철도 TF' 본격 가동

교통체증 유발·운전자 보행자 안전 위협 공사구간 30일 내 손보기로

광주시가 교통체증을 발생시키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광주 도시철도 공사 구간의 위협 요소를 30일 안에 손보기로 했다.

기울어진 복공판, 도로 단차, 불규칙하게 포장된 도로를 새롭게 포장하고, 운전자를 혼란 스럽게 만든 차선도 새롭게 도색한다는 것이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민불편 신속대응 도시철도 태스크포스'(TF)는 30일 동안 도시철도 2호선 공사구간에 대한 안전조치에 나선다.

TF는 장기화된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해 피로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꾸려진 전담팀이다.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해 TF는 지난8일 4개 실 및 본부, 9개 부서와 함께 첫회의를 개최하고 대응책을 마련했다.

복공판(覆工板)을 가장 먼저 정비하기로 했다. 이는 도시철도 공사현장 위로 차량이나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임시로 깔아두는 철판으로, 운전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다.

이에 광주시는 공사구간 복공판과 인접도로의 단차나 기울어진 복공판, 울퉁불퉁한 포장도로로 인해 교통 불편과 차량 손상,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해 재포장 작업을 진행한다.

실제 이날 광주시가 방문한 금호지구 일부 구간에서는 20㎝ 단차가 확인되기도 했다.

우선 민원 접수가 많은 금호지구, 광주교대~서방사거리 주변, 회재로(원광대병원사거리~주월교차로), 조선대 인근 등 4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6개 공구(1공구 3개·2공구14개·3공구6개·4공구 10개·5공구 25개·6공구 21개) 중 79개 구간 총 15㎞의 도로에서 작업이 진행된다.

1공구는 상무중앙로 한국은행 주변, 상무중앙로 BYC빌딩 주변, 상무중앙로 상무역 주변이며, 2공구는 중앙공원~월드컵사거리, 운천저수지~금호지구입구사거리, 금호지구입구사거리~금호시영1단지, 금호시영1단지~풍금사거리, 풍금사거리~중앙공원 등이다.

3공구에서는 월드컵경기장 사거리~꽃차원삼거리, 꽃차원삼거리~풍암호수사거리, 대주아파트 삼거리 부근, 대주아파트삼거리~원광대병원사거리, 원광대병원 사거리 부근, 주월파출소 사거리등에서 재포장 공사가 진행된다.

4공구는 무등시장(주월동)~주월교차로, 신우아파트(백운동)~주월교차로 , 주월교차로(백운동)~백운광장, 남광주농협(봉선동)~명지로드힐 구간이다.

5공구는 천변우로 주변, 살레시오사거리 주변, 동계천로사거리 주변, 지산사거리 주변, 조대사거리 부근 등이 대상이다. 6공구에서는 산수오거리~산수교회, 산수동 반디주유소~산수오거리, 풍향동 백림약국~광주농협풍향점, 광주교대융합관 앞~광주교대 정문, 계림동 금호타운아파트주변~광주북구청소년경찰학교, 서방사거리 인근, 중흥동 광주역 주변등이다.

공사는 8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퇴근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공사가 진행된다.

광주시는 최근까지 지하에서 발생한 대량의 암석과 지장물 등을 제거하는 공정을 진행함에 따라 단차 등을 줄이는 작업에는 제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공사 전 구간에서 지하에 매립된 암석과 지장물을 모두 철거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이와함께 잦은 차로 변경과정에서 덜 지워진 노면표지가 다시 나타나는 차선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 교차로 구간을 중심으로 차선, 유도선 도색작업을 시행한다.

또 버스 정류장 주변공사시 보도구간 점유로 보행공간이 줄어드는 문제와 안전시설물 설치 불량에 따라 보행로, 횡단보도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도로철도 2호선 공사로 시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전담팀을 운영하게 됐다"며 "시민불편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난공사 구간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7공구(전남대~오치초교)와 10공구(OB맥주공장~양산지구 사거리) 구간에 대해서는 보완 설계 중이며 공법을 확정해 올해 연말내에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9일 광주시 북구 필문대로 광주교대 앞 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에서 기울어진 도로 위를 차량이 주행하고 있다. 복공판이 설치된 도로의 단차가 매우 큰데다 포장 상태도 엉망이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못한다

대통령실 "정치중립 위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배석자 중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다음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의 조치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면서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내용을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했고, 강 대변인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고 반박했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이 위원장을 질타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언론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정정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 위해 3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 예정"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를 위해 3군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안 후보자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정책연구를 통해 통합 방안을 마련해 사관학교 통합을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군 교육기관 단계적 통합'을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이런 공약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는데 안 후보자가 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를 명확히 드러낸 셈이다.

군 교육기관 통합은 우선 육군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부터 통합하고, 이후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까지 통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안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해서는 "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방첩사가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8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 대통령의 '군 정보기관(방첩사) 개혁' 공약과 관련해 방첩사의 정보·수사·보안 등 3대 기능을 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방첩사에 방첩 기능만 남기고 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정보와 보안은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에 넘기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안 후보자는 "계엄에 동원된 방첩사, 정보사 등은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방첩사, 정보사 등의 조직·기능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방첩사와 함께 정보사에 대한 개혁 의지도 피력했다.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서는 남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되살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복원 공약에 동의하냐'는 강 의원의 질의에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9·19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